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귀족 검사·위장전입 공방 치열할 듯

민주 “증여세 탈루 등 철저히 따지겠다” 여권 “천성관 낙마 악몽 재현되나” 불안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전 검열’을 통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장인으로 부터 무기명채권 증여 ▲이중 소득공제 ▲요트와 승마 등 호화 취미와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 참여 등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가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잡탕 뒤지겠다”(김유정 대변인)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버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의혹이 하나 둘 늘어나자 또다시 ‘천성관 낙마’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종률 법무본부장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장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후보자와 비교할 때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이고 난형난제(難兄難弟)”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김 총장 후보자를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인 점과 요트와 승마 즐기는 호화 취미 생활을 예로 들면서 ‘귀족 검사’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태세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김 후보자는 주로 저명인사, 기업인이나 재벌 2세들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 남산 소재 우리나라 최고급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의 회원”이라며 “구입가 6천만원 짜리 회원권은 지금 7천500만원을 호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선 검사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게 저간의 실정”이라며 “김 후보자가 최고급 사교클럽의 회원이 된 것은 명실상부한 ‘귀족 검사’로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1992년,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리고 그런 인사가 검찰의

총수가 된다면 국민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공식 업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 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비운 처사 역시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점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연간 카드 사용액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장인으로 부터 받은 액면가 5억원짜리 무기명채권 등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강성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본인 스스로 이미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어제부터는 이중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정기과 중에 기관인 검찰총장은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장전입은 과거의 범법행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운석 의원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득 이중공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표) 등 당직자들이 5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가두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포=이성선기자 sslee@kwangju.co.kr

정세균 “F1지원법 9월 통과 확실”

전남서 이틀째 장외투쟁 ... “미디어법 반드시 철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미디어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열악한 지역언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철폐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남지역에서 이틀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 대표는 이날 목포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최대 현안인 F1지원법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100%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F1지원법은 전남도가 필요하고 민주당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F1지원법은 틀림없이 통과될 것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이 장기간 국회

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잘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호남지역 SOC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호남 SOC예산을 지키기 위해 예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정 대표는 “분당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 지지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승했다가 한나라당에게 역전된 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이후 재역전돼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당 기여도가 높으면서 유능한 당원과 지역주민에게 존경받고 열심히 일하는 풀뿌리 인사를 균형있게 공천해 민주

당이 신뢰받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최고위원, 주승용 전남도 당위원장, 박지원·이낙연·유선호·이윤석·김영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목포시내에서 미디어법 폐지 서명운동과 가두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다음날인 6일에는 광주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오후 6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를 개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5일 ‘광주·전남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영구집권 기도, 지역차별 망령을 분쇄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규탄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이성선기자 sslee@

親李 公성진-친박연대 맞짱 뜨다

“친박 해체 해야” “국민 무시 막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당설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친박연대가 한판 대결을 벌였다.

선공을 한 것은 공 최고위원. 그는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간 합당 가능성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한 뒤, “이것은 친박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박 전 대표나 친박 의원들이 친박 연대의

정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해산 내지는 해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신 해산을 주문했다.

이에 친박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세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 최고위원이 국민 223만명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국민의 정당인 친박연대에 대해 해체 운운하는 것은 정치윤리에 맞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책임을 내주고 하는 알뜰한 하수인의 역할은 응당받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대표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이나 잘 대표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클린디젤자동차도 세제 감면해야”

강운태 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클린디젤자동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정돼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클린디젤자동차에도 부여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클린디젤자동차에도 차량당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가 각각 최대 100만원, 40만원, 100만원까지 각각 감면되고 도시철도채권(최고 200만원)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연료



전자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기준을 ‘CO2 배출량’과 ‘연료 효율’에 두지 않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특히 클린디젤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못지않게 연비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어 유럽 시장의 경우 신차의 50% 이상이 클린디젤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로 급속하게 보급되는 추세”라며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SSM 허가제’ 법 개정 추진

민생 행보 구체화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편으로 민생 행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5일 ‘MB정부가 망친 민생경제, 민주당이 회복시킨다’는 기치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시작으로 8월 한달 간 비정규직, 대학생 등록금, 사교육 문제 등 ‘민주당 10대 민생과제’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유

통형행평가를 실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규정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형마트와 SSM을 상업지역에만 들어서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한편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문발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8. 22시분 본원출신
공무/전남 정명 1084.71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공무원 합격=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사무직/일반직/법원직/소방직
고위공직직/지방자치직/농림직/기술직/경찰직

전원고시 합격사례

2008년 10월 1차 지방공무원 고시 1등 합격자 1명
2008년 10월 2차 지방공무원 고시 1등 합격자 1명

가능직종과 수험생

공무원 100명, 1000명, 10000명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농림, 기술, 일반

개강 8.3

중합/단과반
(대입/재입학/복합/재입학)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안
234-0234

소방직 대폭 확대

2009년 10월 1차 소방직 고시 1등 합격자 1명
2009년 10월 2차 소방직 고시 1등 합격자 1명

소방직특수장기 무료체험

소방직특수장기 무료체험
소방직특수장기 무료체험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소방직전문학원

www.hanyoung.co.kr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10명 중 7명 합격률

민입영이 합격강좌

민입영이 합격강좌
민입영이 합격강좌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한영고시학원

김영현입학원

김영현입학원
김영현입학원